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36('24-2) | 2024. 2. 1

하마스 침공 방식과 이스라엘의 초기 대응, 한반도의 대비수준은?

김성진

통일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

이성춘

미래는 제대군인만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니다

최규상

하마스 침공 방식과 이스라엘의 초기 대응, 한반도의 대비수준은?

김 성 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은 무장 정파(하마스)가 기습 침공한 초기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 1973년 10월 전쟁 당시 대응에 실패한 패턴과도 데칼코마니다. 이후 발 빠르게 공세로 전환하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쟁 양상은 갈수록 확산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기습 침공을 당한 이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레바논 베이루트를 폭격하여 하마스 정치국의 2인자(살레흐 알아루리)를, 미국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드론으로 친이란 민병대 지도자(카짐 알자와리)를 제거했다. 휴전 협상은 중단되었고, UN 안보리의 휴전 결의안 추진은 난감해졌으며, 미국의 영향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반이슬람·반유대주의 갈등이 ‘문화전쟁(Culture War)’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중동 세력들을 후원하는 이란은 시온주의자 정권이 테러와 범죄에 기반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온주의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불씨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공습이 자칫 레바논 및 중동 세력과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베이루트 공격은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에 의해 중동 전역(全域)이 전쟁의 수렁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는 차원에서 위험성이 한껏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기에 힘에 의한 정글의 법칙이 우선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익을 추구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보호 할 책무를 실천함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면적과 비교하면 1/5 정도다. 이들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으나, 이후 민간인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진력하고 있어서다. 이스라엘과 한반도가 보유하고 있는 대피 시설의 수준을 돌아보자.

이스라엘 국민은 전쟁 중임에도 인접한 대피소로 가는 불편 이외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로켓포 공격에 견딜 수 있는 강철·강화 콘크리트로 구축한 대피 시설이 지역마다 고르게 설치되어 있어서다. 2000년대로 들어서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신축건물에 대피소를 설치함은 의무조항이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자지구엔 인접한 지역은 15초 이내에, 이외의 지역은 45초 이내에 대피할 수 있다. 포격·폭격이 시작돼도 주민들이 대피소에 도착하기 이전, 다층 방공체계(아이언 돔, 최대사거리 10km)가 대다수 요격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언 돔 10개 포대를 15개 포대(최대 1,200발 동시 요격)로 늘이고 있고, 패트리엇 등을 비롯한 물리적 방어체계(defense system)도 촘촘하다. 우리의 전체 방공전력보다 더 많다고 이해하면 될 듯싶다. 이러한 환경은 현지 주민들이 외부 공습에 불안해하지 않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습을 바라볼 여유마저 가지게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작년 12월 제8기 9차 전원회의와 올해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제1적대국가”로, “대사변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을 평정하고, 영토로 편입한다.”라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숨겨진 맥락을 짚어보면, 내부의 이완(弛緩) 현상에 관한 우려와 긴장감이 상당하며, 조바심도 묻어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여유를 가질 계제(階梯)는 아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협박을 당한 지 어언 30년으로 최근엔 핵무력정책법을 공포하였고, 핵전쟁까지 운운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대피 시설은 약 18,000개소가 있지만, 대다수 지하주차장 또는 지하철역이다. 더욱이 평소 관리는 부실하며,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국민재난 안전 포털 앱(안전디딤돌)’은 엉뚱한 장소로 안내하기도 한다. 노년층 또는 장애인 등 거동이 쉽지 않은 계층에 대한 배려도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북한의 대규모 포격(폭격)과 생화학 공격이 수도권과 신도시에 집중될 경우, 주민들을 보호할 대피 시설이 시급하지만, 태부족이며, 핵·화생방 대비수준은

저조하다. 전쟁 외에도 COVID-19와 팬데믹 현상, 기후변화 등의 재해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나, 민방공(민방위) 대피 훈련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군사적(안보위기) 측면에서는 명백한 적성국이다. 북한의 김정은과 전쟁지도부는 당연히 주적(主敵)이며, 장사정포 1,000여문이 수도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하마스의 침공 방식과 같이 영역이 모호한 하이브리드전 방식으로 침공하며 장사정포 16,000여발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現 대응 수준과 대비체계로는 즉각 대응(대피)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처럼 요격이라도 해야 하지만, 기본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형 3축 체계’ 즉, Kill Chain(선제타격) - KAMD(요격)-KMPR(대량응징보복)이 계획되어 있지만, 완성형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대량응징보복은 영토나 국민이 피해를 본 다음에 시행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기에 핵심은 선제타격과 요격단계로 봐야 한다. 최근 요격능력의 핵심인 SM-3 미사일(최대사거리 2,500km) 도입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사업준비 예산(10.08억) 전액이 삭감됐다. 이스라엘제 아이언 돔 도입은 국내개발(LAMD, 최대사거리 5km)로 전환됐다. 요격능력이 떨어지는 데 부담할 비용은 커졌고, 이마저도 2030년이 돼야 배치할 수 있다. “담을 뛰어넘는 무장 강도를 잡으려는데, 자극하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가만히 있어라”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는지...

통일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

이 성 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북한학 박사)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면 늘 고민의 연속이다. 특히 남북문제나 통일교육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법적인 사고이다. 법적인 사고는 필자의 마음속에 평생자리 잡고 있는 화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평소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체계를 의미한다.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이지만, 그 명확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매년 그래왔지만 작년 연말은 물론 새해 벽두부터 태도가 매우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및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헌법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 올해 헌법 개정 이어 2026년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규약을 고쳐 북한의 법규범 체계에서 완전히 ‘통일’을 지우고 나면, 2027년 출범할 대한민국의 새 정부와 마주하고 싶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쫓붙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의 대책”도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등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통일원칙을 일컫는 것으로 이 탑은 김일성의 통일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또한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전담해 온 대남기구를 공식 폐지함에 따라 50년 넘게 이어져 온 남북관계가 또 다른 변화의 장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유산마저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이어진 남북관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북한의 말 폭탄,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에 이어 법적인 부분까지 손대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방위적 도발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을 흔들고 있다. 북한의 이런 주장과 행동들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자유민주주의 체제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우리 사회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는 심리전의 일환일 수도 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모든 법 위에 당규약이 있고 당 규약 위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으며,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김정은의 교시가 있는 북한의 헌법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사항은 아니다. 북한은 법치 강화의 목적보다는 유일지배체제의 영역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하여 세습 체제를 강화하는 용도로 헌법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72년 7차 개헌 시 처음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헌법전문에 신설 추가하였고, 8차 개정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하였다. 북한은 1972년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정 시 제5조에서 처음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북한이 통일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정책과 교육을 이어나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본을 세워야 할 것이다. 헌법은 최고의 규범성을 가진 국가 질서의 기초로서 모든 법률규범의 정립 근거이며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양해야 할 통일교육원은 1990년대 말 인력이 대폭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 예산은 최근 몇 년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차원의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부족한 역량과 환경은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가져왔고,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구체화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격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이제는 통일교육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때이다. 통일교육은 그 어느 특정세력이나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통일

의 그 날까지 모두 힘을 모아 참여하고 함께 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관자(管子)의 권수(權修) 편에 “1년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 만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일 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 만한 것이 없다. [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 一樹一獲者穀也 一樹十獲者木也 一樹百獲者人也].”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도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통일교육 또한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고 군사적으로 많은 위협을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되 헌법에 제시된 통일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새로운 통일 전략과 대책 및 사회적 공감을 위해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때이다.

미래는 제대군인만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니다

최 규 상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초록소프트(주) 국방AI사업팀장)

군복을 입은 직업군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군복을 벗어야 하는 정년의 시간이 찾아온다. 아무리 상위 계급에 진출하였다고 하여도 평생 군복을 입고 직업군인의 길을 이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군복을 벗는 시기만 다를 뿐이다. 이 무렵이 되면 전역을 앞둔 직업군인들의 재취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전역을 앞둔 군인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전역 또는 퇴역하는 군인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직장인의 정년에 미치지 못하는 나이로 아직은 가족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남아있고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처지라 재취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짧게는 수년으로부터 길게는 수십 년을 오로지 군사 업무에만 전념했던 직업군인에게 재취업의 문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직업군인이 눈뜨면 코도 베어간다는 일반 사회에 적응하기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사회 진출을 위한 첫 단계인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군대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군대는 국가 안위라는 숭고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집단이다 보니 군대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적 이익을 최우선 하는 삶을 요구받는다. 군대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어 대개의 직업군인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개인적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다. 요즘처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회 전 분야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직업군인들의 상대적 정체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전역을 앞둔 직업군인들이 급격히 변화한 일반 사회에 적응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직업군인들이 재취업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직업군인의 대부분은 전역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재취업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전역과 동시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꿈꾸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 보지만 막상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의 직업군인은 어쩔 수

없이 조건이 좋지 않은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경험도 없이 덜컥 자영업을 선택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재취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제야 재취업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된다. 준비 없이 전역을 맞은 제대 군인이 나를 위해 준비된 미래는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인간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의 능력을 이미 뛰어넘어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존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인류의 직업 상실 시대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변혁의 시대에는 준비하지 않은 채로 전역하는 직업군인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전역을 앞둔 군인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지원센터나 육군의 제대군인지원처와 같이 제대 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도와주고 있지만 제대 군인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재취업은 요원한 일이다.

전역하는 제대 군인의 재취업 준비는 자신의 자질과 역량,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재취업 분야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바를 보완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과정은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내부 역량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최선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과도 같은 SWOT 분석 과정에 견줄 수 있다. SWOT 분석의 SW는 기업 내부의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을 의미하며 OT는 외부 환경적인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요인을 의미한다. 전역을 앞둔 직업군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질,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직업군에 진출하려 할 때 자신에게 기회 또는 위협이 되는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이 되는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최적의 재취업 성공전략이 될 것이다.

미래는 결코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되지 않는다. 나의 미래는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격변의 4차 산업혁명시대, 군복을 벗고 냉엄한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모든 직업군인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기원해 본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